

전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도, 민관위원회 열어... 인구 안정화·개인과 사회 도약·도민 삶의 질 제고 목표 생애주기별 함께 양육·청년 도약·미래세대 행복 등 6개 전략 도대 추진과제 마련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그리는 5개년 계획인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북도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2023년 전라북도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인구정

책 비전, 목표, 전략,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5년간 추진할 과제의 재정계획 등을 담았다.

먼저 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전북’을 제시했다. 또 가속화되는 인구감소를 막고자 △전북 인구 안정화, △개인인구와 사회 도약, △도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함께 양육하는

사회 △청년인이 도약하는 사회 △중년과 노후가 활기찬 사회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외국인 포용 사회, △생활인구와 상생하는 사회 등 6개 전략을 도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인구구조 대응과 인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외국인주민, 인구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생활인구 등에 중점적인 전략 및 과제를 수립했다.

더불어 정책방향을 청년인구 순유출

역제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순순환 구조 강화로 전환했다. 또 인구의 양적 접근 위주에서 질적(인구 감소 둔화, 인구변동 등) 접근도 동시에 중시하고, 정책 대상도 상주인구에서 전북도에 관계하는 모든 인구를 포괄하도록 조정했다.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극복과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고령화, 미래세대, 외국인 생활인구까지 인구정책의 각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앞으로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1일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회, 美 워싱턴 주의회 의회 차원 교류협력 강화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 5명, 국주영은 의장 등과 접견 정책 개발·우수사례 공유, 교류협력 추진방안 논의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와 미국 워싱턴 주의회가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김만기 부의장,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11일 의장 집무실에서 키스 게너(Keith Gehner) 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 5명을 접견하고 두 도시간 발전 및 양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2004년 자매결연한 전라북도와 미국워싱턴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미국은 양원제, 한국은 단원제로 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우수 정책개발 사례 공유 등은 양 의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교류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탄소산업은 세계최고의 수준인 만큼 워싱턴주의 항공 우주 산업과 연계한 양 지역간 기술개발 교

류가 이뤄지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주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키스 게너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장은 “이번 전북방문을 계기로 서로 많은 것을 주고 받으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다음 번엔 도의회 대표단이 워싱턴주를 방문해 함께 미래를 구상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북도의회와 미국 워싱턴 주의회 대표단은 탄소와 수소 등 청정 에너지 활용 및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며 두 도시간 환경과 주거 교육 등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1986년 우호협력에 합의한 전북도와 미국 워싱턴주는 200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30여 년간 경제와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도내 550개 마을로 확대

전북도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난해 520개 마을에서 올해 55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철 식사준비로 인한 근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급식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마을 당 연간 40일기준 320만원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급식 지원사는 마을별 농작업 상황에 따라 추진 한다.

전북도는 바쁜 영농철 급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별 공동급식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11일 순창군 구립면 상리마을 공동급식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집중해 생산력을 높이고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강임준 군산시장 1심서 무죄... “심려 끼쳐 죄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회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88) 군산시장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회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 관계에 김중식 전 전북도의회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의사를 표시하고 급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중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우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나머지 증거를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부족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여야,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함께 추진

민주 박광온 원내대표 ‘김남국 가장자산 거래·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필요성 분명해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함께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도 보도 통해 접한 바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다”며 “그런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이 진지하게 논의해 빠른 시간 내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민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그것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아주 신속히 법을 고치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표도 특별 이견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미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실제 재산을 늘린 사례가 발생한 만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권성동 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시각내 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

전용태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 교장, 김재, 남영,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 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

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존재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제40회 임시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 “아·태 마스터스대회 행사 참여하자”

제2회 추경 도의회 정점 설명 등 만전 대응 등도 주문

김관영 도지사가 11일 간부회의를 통해, 12일 시작되는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청원과 도민이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오늘 성화를 채화했고 전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이 열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폐회식에 자발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고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안전사고 예방, 숙박위생 관리 등 대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2회 추경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특별



추문했다.

아울러 농생명 산업 수도 이차전지 육성,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K-문화·체육·관광산업, 전북특별자치도 등 핵심 분야의 비전을 선포한데 이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전, 복지,

환경 분야도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해당 실국에 지시했다.

또한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에 이어 통계데이터 전북센터 개소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으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통계데이터를 적극 사용하고 실국 주요 업무에 관련된 통계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끝으로 5월 축제가 많고 특히 전북대 축제에는 사이 등 유명가수가 출연해 11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학·경찰·소방과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병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공유 및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그린베이 스퀘어, 한국공원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정책사례를 발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교육위 소속 위원들을 비롯한 전북도교육청 한공수 정책국장, 김숙 교육국장, 운영정책기획과장,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정책연수 결과보고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선진지 벤치마킹 후속의 일환으로, 연수 당시 애로사항을 프라이어리 스쿨, 케이브룩 중학교,